

〈논평〉

김병수 대표, 호남고속에 아무 문제없다고? 바로 그 태도가 가장 큰 문제!

수 신	각 언론사 시청 출입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답 당	집행위원장 강문식 (010-5894-1155)

4월 23일 시민의 버스위원회(이하 버스위원회) 운영분과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 김병수 대표는 노사갈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호남고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하며 오히려 “경영이 어려우니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호남고속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시청 앞 항의 선전을 진행하고 있고 회사 안에서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회사의 대표자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한다. 자사의 노동자들을 유령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노동조합을 대하니 노사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없으면 친절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노사갈등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피로해지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호남고속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계속한다면 결국 시내버스 운행중단과 같은 극단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호남고속 김병수 대표의 뼈뿔어진 노사관이 전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병수 대표는 적자가 발생하니 보조금을 늘리고 버스요금을 인상해 돈을 내놓으라는 돈타령만 늘어놓았다. 과립치하기 그지없다.

전주시내버스 업체들은 2012년 불법 직장폐쇄로 27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전주시가 이를 세금으로 보조해 준바 있다. 호남고속이 노사갈등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적자가 발생해도 떼를 쓰면 돈을 받아냈다는 경험 때문이다.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시민의 돈으로 메꿔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에 호남고속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회사의 무책임한 처사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조금, 버스요금 논의 이전에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내버스 문제가 전주시의 핵심 사안이 된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력히 경고한다. 호남고속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그리고 전주시와 버스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도록 적극 대응하라.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상황을 파국으로 내몬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15. 4. 25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